



[금융] '치매보험 만루홀런' DB생명 신계약서 깜짝 4위 04



Economy

| | | | |
|----------|------------------|-----------|----------------------|
| 코스피 | 2089.62 (+12.70) | 코스닥 | 691.55 (-0.39) |
| 금리 (우대금) | 1.98 (0.00) | 환율 (원/달러) | 1123.80 (+0.30) (6일) |

'부패' 누명에 시드는 방산... '국방-산업' 두토끼 다 놓쳐

<이스라엘 모델>

위기의 방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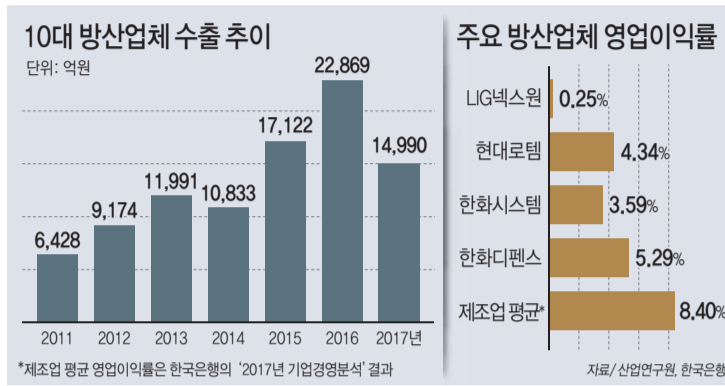
<上>비리산업 전략

방위사업 육성·투명성 목적 관료주의적 감독 수단 전략

방위사업 비리 관련 처벌 무죄율 무려 50% 달해 무리한 수사 결과 지적도

최근 방위산업(이하 방산)이 영업이익이 3~5%에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방산은 경제의 논리를 떠나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주요사업이다. 하지만, 방산업체들은 낮은 영업이익·부패기업·일자리 창출 등 3중고의 압박을 받고 있어, 방산 시장을 떠나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큰돈버는 부패기업 이미지 벗어나 채우석 방위산업협회장은 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방산 콘트롤 타워의 부재로 방산업체들과 방산이 위기에 놓여있다"고 전제한 후 방산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회장은 "방위사업상 방산기업은 원가를 공개하는 대신 9%의 영업이익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방산업체의 영업이익은 높아도 3~5% 수준"이라며 "방위사업의 육성·투명성이라는 목적이 관료주의적 관리·감독의 수단으로 전락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관료들이 목적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성과만을 생각하다보니 규제를 위한 관리 감독이 방산을 옥죄이게 된 것"이라며 "이런 관리·감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벌어진 문제가 방산 비리·부패라는 누명을 쓰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적하거나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등 검찰

이 구속기소한 사건의 대다수는 일반 형사범의 무죄율의 17배에 달한다.

지난달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사업 비리 관련 처벌 현황 진단 및 분석 연구' 발표에서 최기일 국방대학교 교수는 "통영함 등 주요 8개 사업과 관련해 구속기소한 34명 중 1심 무죄는 11명, 2심 무죄는 17명으로 구속 후 무죄율이 무려 50%에 달했다"며 "이 같은 무죄 비율은 3% 안팎에 불과한 일반 형사범 무죄율의 17배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산비리를 근절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기체계의 획득과정과 방산시장의 흐름에 밝은 전문가들은 감사원과 검찰이 전문지식 없이 무리한 수사를 펼친 결과라고 지적한다.

무리한 수사가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마저 '부패 노

이로제'에 빠지게 한 것이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방사청은 국방컨벤션에서 "2018 방위사업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실상 방사청이 방산을 '부패'라는 틀속에 가둔 셈이다.

◆방산의 미래를 준비해야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방산의 역사와 과정을 짚어보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방사청 설립으로 그동안 묻혀왔던 문제가 드러나 상대적으로 비리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홍 편집장은 "방산의 시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자주국방으로 시작됐지만, 그 이면은 미국의 무상군사원조가 끊어질 상황에서 60만 대군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면서 "기본적인 총기와 화포조차 국산화하지 못하면 막대한 외화를 들여 수입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한국 방산의 역사를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국방과 국가경제란 양 측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의 자생적 능력을 키워줘야 할 시기"라며 이스라엘 방산업체의 발전 사례를 제시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방산물자의 국산화를 시작했지만 현재 이스라엘 방산기업들은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거나 가능성이 있는 업체의 육성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턱없이 짧은 연구기간, 원가후리기식 최저입찰, 국내업체에게만 가혹한 지체상금 등 가혹한 방산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절차상의 문제만으로 방산업체를 파는 안된다는 것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문형철 국방전문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가을 불청객 초미세먼지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건보료 3.49% 인상... 8년만에 최대폭

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 직장인 1월 평균 3746원 ↑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직장인들은 월 평균 보험료를 3746원 더 내야한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

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나란히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

심)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씩 인상되면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등으로 오르다가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大-中企 이익 나누면 세제혜택

당정,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검증 통해 인센티브 차별화

<성과공유제 vs 협력이익공유제 비교>

| 성과공유제 | 협력이익공유제 |
|--|--|
| ①원가 연동가격제* (Cost-Plus Pricing) 모델 | ①산출연동보상제* (Output-based) 모델 |
| * 납품가격이 실제 원가에 연동하여 변경되는 반면, 이익마진은 원가의 일정비율(%)로 고정 | * 납품가격 및 협력사 이익마진이 협력사업의 최종결과물(Output)인 대기업 이익 등과 연동 |
| ②수탁기업이 달성한 성과 공유 (원가절감, 물량확대 등) | ②공통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 추가 이익공유 |
| ③원가정보 공개 필요(추가 단가인하 불가) | ③원가정보 공개 불필요 |
| ④하도급 구조에 적합 | ④개방형 혁신에 적합(미래 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 |
| ⑤제조업에 적합한 모델 | ⑤제조, 유통·IT·플랫폼 등 신산업 적합 |
| ⑥대기업의 원가경쟁력 확보에 도움 | ⑥중기 혁신 유인과 대기업 경쟁력 강화 |

대기업이 원·하청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프로젝트 등을 통해 거둔 이익을 이들 기업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성과공유제와 함께 협력이익공유제를 추가 시행키로 하면서 정보기술(IT), 유통, 플랫폼 관련 대기업들도 하청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를 갖고 '대·중소기업이 함께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협력이익'이란 대기업이 한 해 사업을 통해 얻은 전체 이익이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부문별, 사업장별로 원청(위탁)인 대기업과 하청(수탁)인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 달성한 재무적 성과를 말한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판매수익배분 등에 대해 계약을 한 뒤 이들이 노력을 통해 신제품 개발, 국산화 등 연구개발(R&D)에 성공, 판매량이 늘거나 이를 통해 영업이익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당초 계약한 만큼을 나눠주는 구조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장공인정책실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존 성과공유제의 한계였던 중소기업의 원

가정보 공개가 필요 없는 모델로 대·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양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여부, 대상기업, 목표설정, 이익공유 정도 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도입 기업과 공유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인·검증 시스템과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으로 나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우수' 기업의 경우 ▲수위탁 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등급별 가점(1점)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동반성장주 정부포상심사후포상(대통령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도입

하는 모든 기업에게는 법인세 세액공제 10%, 손금인정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3) 적용, 정책금융기관 정책자금 융자 우대, 정부 R&D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의 유형도 각각 제시했다.

협력사업형은 R&D 등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고, 마진보상형은 유통이나 IT 등 플랫폼 업종에서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이익을 콘텐츠 조화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인센티브형은 대기업이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난 뒤 원가 절감 등 직접적 이득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한 기존의 성과공유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